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설문 결과



목차



1장

분석 개요	1
1. 분석 목적	3
2. 참여단 특성	4

2장

AI 전환의 위상과 영향 인식	5
1. 3대 변화 중 AI의 위상 (문5~8)	7
1) 3대 변화 대응 시급성	7
2) 향후 10년 동안 3대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7
3) 향후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	8
4)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전체	9
5)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3대 동인별	10
2. 총론: AI 확대와 삶에 대한 영향 전망 (문11·12)	11
1) AI 관련 긍정 인식	11
3. 각론1: 일자리 위험과 기회 (문13~16)	11
1) 본인 일의 AI 대체 가능성과 일자리 전망 : 전체	11
2) AI 확산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12
3) AI 확산에 따른 고용문제 염려	12
4) AI 확산에 따른 고용 기회 기대	13
4. 각론2: 불평등과 이익 집중 우려 (문9, 17, 20)	14
1) 현재 사회문제의 심각성	14
2) AI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이익 집중 우려	15
3) AI 이익의 집중 가능성	15

목차



3장

대응의 필요성: 기존 제도의 한계와 기본사회 17

1. 사회안전망 만족도와 현 제도의 대응 가능성 (문3, 19) 19

1) 사회보장체계·사회안전망 만족도 19

2)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 전체 19

3)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 주관적 계층별 ... 20

2. 분배체계 전환 필요성 (문18) 20

1) AI 확대와 분배방식 20

3. 기본사회 인지도와 공감도 (문24·25) 21

1) 기본사회 인지도 21

2) 기본사회 공감도 21

4.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과 실현 전망 (문26·27) 22

1)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성 22

2) 기본사회 실현 전망 22

3) 기본사회 실현 전망 : 2일차 의제 분임별 22

5.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와 기대·우려 (문28·29, 30·31) 23

1)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23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24

3) 기본사회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 25

4) 기본사회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 25

4장

대응 수단에 대한 선호 27

1. 일자리와 직업전환 (문21, 40~44) 29

1) 고용위험 대응의 책임 주체 : 전체 29

2) 고용위험 대응의 책임 주체 : 2일차 의제 분임별 29

3) 일자리·직업전환 대응 정책 동의도 30

4)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방안 31

목차



2. 기본서비스에 대한 인식 (문37~39)	32
1) 기본서비스별 기본보장 필요성	32
2)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 전체	33
3)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 2일차 의제 분임별	34
4) 기본서비스 정부 지출 성격에 대한 입장 : 전체	35
5) 기본서비스 정부 지출 성격에 대한 입장 : 2일차 의제 분임별	35
3. 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문32~36)	36
1) 소득보장 대상에 대한 입장	36
2)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입장 : 전체	36
3)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입장 : 주관적 계층별	37
4) 활동 기간 소득보장과 확대 필요성	37
5) 놓여준 기본소득 향후 방향	38
6)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 전체	38
7)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 2일차 의제 분임별	39
5장 재원 마련과 재투자	41
1.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 (문22, 45-4, 52)	43
1) AI 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입장 : 전체	43
2) AI 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입장 : 주관적 계층별	43
2. 재원 방안과 추가 부담 의향 (문45·46, 31-1)	44
1) 재원 마련 방안 필요성 공감도	44
2)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 전체	45
3)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 주관적 계층별	45
4)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46

목차



3. 자원 사용처 (문23, 47·48)	47
1) AI 관련 자원의 우선 사용 분야	47
2)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전체	48
3)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2일차 의제 분임별	48
4)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 전체	49
5)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 2일차 의제 분임별	49
4. 운용 원칙과 신뢰 (문49, 31-5)	50
1) 국부펀드·국민 공동자산 운영의 원칙	50
2) 공동자산·공공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	50
5.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인식 (문50·51)	51
1)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	51
2)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사용 목적	51

6장

공론화 과정 평가	53
1. 공론화 과정의 도움 정도와 학습 (문53·54)	55
1)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55
2) 공론화 자료 학습 정도	56
2. 자료집·전문가 발표·분임토의 평가 (문55~57)	57
1) 자료집 평가	57
2)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	57
3) 분임토의 평가	58
3. 공론화 참여 효과와 만족도 (문58·59)	60
1) 공론화 참여 효과	60
2) 공론화 만족도	60
4.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 (문60, 주관식 유형화)	61

목차



표 목차

[표 1-1] 참여자 특성	4
[표 2-1] 3대 변화에 대한 대응 시급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7
[표 2-2] 3대 변화가 향후 10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긍정적 영향)	8
[표 2-3]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변화	8
[표 2-4]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 (2개까지 선택, 문7 응답자 전체)	9
[표 2-5]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 (2개까지 선택)	10
[표 2-6] AI 관련 긍정 인식	11
[표 2-7] 본인 일의 상당 부분이 10년 내 AI로 대체될 가능성 (높다)	11
[표 2-8] 본인 일의 상당 부분이 10년 내 AI로 대체될 가능성 (높다) : 종사형태별	12
[표 2-9] AI 확산이 전체 일자리에 미칠 영향	12
[표 2-10] AI 고용문제에 대한 염려 (염려된다)	13
[표 2-11] AI 고용 기회에 대한 기대 (기대된다)	13
[표 2-12] 우리 사회 문제의 심각성 (심각하다)	14
[표 2-13] AI 확대 시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동의)	15
[표 2-14] AI 이익의 대기업·플랫폼 집중 가능성 (동의)	15
[표 3-1] 현재 사회보장체계·사회안전망 만족도 (만족)	19
[표 3-2]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동의)	19
[표 3-3]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동의) : 주관적 계층별	20
[표 3-4] AI 확대와 분배 방식에 대한 입장	20
[표 3-5] 공론화 참여 전 기본사회 인지도 (기초조사)	21
[표 3-6]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 (공감한다)	21
[표 3-7]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 (동의)	22
[표 3-8] 기본사회 실현 전망 : 전체	22
[표 3-9] 기본사회 실현 전망 : 2일차 의제 분임별	23

목차



[표 3-10] 기본사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2개까지 선택)	23
[표 3-1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24
[표 3-12] 기본사회 정책 확대 시 기대 (동의)	25
[표 3-13] 기본사회 정책 확대 시 우려 (염려)	26
[표 4-1] AI 등 고용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29
[표 4-2] AI 등 고용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 2일차 의제 배너	30
[표 4-3] 일자리·직업전환 정책에 대한 동의 (동의)	30
[표 4-4]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방안	31
[표 4-5] 서비스별 기본 보장의 필요성 (필요하다)	32
[표 4-6]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3개 선택)	33
[표 4-7]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3개 선택) : 2일차 의제 분임별	34
[표 4-8] 기본서비스 정부지출의 성격에 대한 입장	35
[표 4-9] 기본서비스 정부지출의 성격에 대한 입장 : 2일차 의제 분임별	35
[표 4-10] 소득보장 대상에 대한 입장	36
[표 4-11]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입장 : 전체	36
[표 4-12]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의견 : 주관적 계층	37
[표 4-13] 활동 기간 중 소득보장 필요성 (동의)	37
[표 4-14] 농어촌 기본소득의 향후 방향	38
[표 4-15]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2개 선택)	38
[표 4-16]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2개 선택) : 2일차 의제 분임	39
[표 5-1] AI 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인식 (동의·필요)	43
[표 5-2]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인식 (동의·필요) : 주관적 계층	44
[표 5-3] 기본사회 자원 마련 방안별 필요성 (필요하다)	44
[표 5-4]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45
[표 5-5]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 주관적 계층	46
[표 5-6]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염려)	46
[표 5-7] AI 관련 자원의 우선 사용 분야 (2개까지 선택)	47
[표 5-8]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48
[표 5-9]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2일차 의제	48

목차



[표 5-10]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49
[표 5-11]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 2일차 의제 배너	49
[표 5-12] 국부펀드·국민 공동자산 운영의 원칙	50
[표 5-13] 공동자산·공공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 (염려)	50
[표 5-14]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 (필요하다)	51
[표 5-15]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사용 목적	51
[표 6-1] 공론화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도움이 되었다)	55
[표 6-2] 공론화 자료 학습 정도 (모두 보았다)	56
[표 6-3] 자료집 평가 (그렇다)	57
[표 6-4]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 (그렇다)	58
[표 6-5] 분임토의 평가 (그렇다)	59
[표 6-6] 공론화 참여 효과 (그렇다)	60
[표 6-7] 공론화 전반적 만족도 (만족)	60
[표 6-8]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____이다' 주관식 응답 유형 (사후조사)	61

부록 설문지 67

시전환에 따른 기본사회공론화

1장

분석 개요



1장 분석 개요

01 | 분석 목적

이번 공론화의 목적은 크게 △기본사회 자체에 관한 목적과 △AI 전환에 관한 실질적 분석 목적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본사회에 대한 비전과 수용성 확인

첫째, 국민이 기본사회를 어떤 사회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기본사회에 찬성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직업전환, 지역균형, 지속가능성, 공동자산 등 가운데 어떤 요소가 기본사회의 핵심이라고 인식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확인한다. 기본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 기본사회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선호를 확인한다.

셋째, 기본사회 추진의 조건과 우려를 확인한다. 특히 자원 마련, 조세·사회보험료 부담, 공동자산과 기금의 운영, 정치적 운용 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2) AI 전환과 기본사회의 관계 확인

이번 공론화의 보다 실질적인 목적은 AI 전환을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며, 그 인식이 기본사회 및 재분배·재투자 등과 관련한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를 사회적 기회로 보는지 위험으로 보는지, 일자리·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기존 노동소득 중심 분배체계와 사회보장체계가 AI 전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지, AI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숙의 효과 확인

T0-T1-T2 반복 측정을 통해 숙의 전후에 판단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어떤 쟁점은 숙의 후 공통된 판단으로 수렴하고 어떤 쟁점은 계속 의견이 분산되는가를 파악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특히,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 및 35세 이상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주목한다.

02 | 참여단 특성

국민숙의단은 22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34세 이하가 102명(46%), 35세 이상이 121명(54%), 남성 120명·여성 103명, 수도권 118명·비수도권 105명이다. 가중값 적용 시 34세 이하 56명·35세 이상 167명이다.

이를 2026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가중값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참여자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조사완료 사례수(명)	비율(%)	가중값 적용 사례수(명)	비율(%)
전체		(223)	100	(223)	100
세대	34세 이하	(102)	46	(56)	25
	35세 이상	(121)	54	(167)	75
성별	남성	(120)	54	(110)	49
	여성	(103)	46	(113)	51
연령	15-24세	(35)	16	(24)	11
	25-34세	(67)	30	(32)	14
	35-44세	(29)	13	(32)	14
	45-54세	(33)	15	(41)	18
	55-64세	(33)	15	(40)	18
	65세 이상	(26)	12	(54)	24
권역	서울	(47)	21	(40)	18
	경기/인천	(71)	32	(74)	33
	충부권	(33)	15	(32)	14
	호남권	(27)	12	(24)	11
	대경권	(19)	9	(20)	9
	부울경	(26)	12	(33)	15

이는 223명 전체 참여자와 가중값이며,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 및 35세 이상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에 별도 가중값을 부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공론화

2장

AI 전환의 위상과 영향인식



2장 AI 전환의 위상과 영향 인식

01 | 3대 변화 중 AI의 위상 (문5~8)

1) 3대 변화 대응 시급성

- △AI 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기본사회 동인인 세 축은 학습을 전혀 하지 않은 T0 단계에서 대응 시급성 동의도가 90% 내외로 높은 수준이었음
- 다른 두 축에 비해 AI 전환의 대응 시급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론화가 AI 전환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됨

[표 2-1] 3대 변화에 대한 대응 시급성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AI 전환	87	89	98	+11
34세 이하	87	92	96	+9
35세 이상	88	88	99	+11
인구구조 변화	93	96	93	0
34세 이하	89	95	87	-2
35세 이상	95	96	95	0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88	90	90	+2
34세 이하	82	77	73	-9
35세 이상	91	94	96	+5

2) 향후 10년 동안 3대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 AI 전환에 대해서는 공론화 이전부터 긍정 전망이 매우 높아 숙의에 따른 추가 상승 폭이 제한적인 반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는 숙의를 거치면서 긍정적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이러한 변화는 35세 이상에서 두드러져, 인구구조 변화는 18%에서 52%로 34%p, 기후위기·에너지 전환은 32%에서 53%로 21%p 상승함. 반면 34세 이하는 각각 +2%p, +4%p에 그쳐 사회 전환의 긍정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뚜렷한 세대 차이가 나타남

[표 2-2] 3대 변화가 향후 10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긍정적 영향)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AI 전환	86	83	90	+4
34세 이하	74	74	80	+6
35세 이상	90	86	94	+4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29	28	45	+16
34세 이하	18	19	22	+4
35세 이상	32	31	53	+21
인구구조 변화	17	24	43	+26
34세 이하	15	14	17	+2
35세 이상	18	27	52	+34

3) 향후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

- 속의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한 판단이 인구구조 변화에서 AI 전환으로 뚜렷하게 이동함. AI 전환은 37%에서 63%로 26%p 상승한 반면, 인구구조 변화는 17%p, 기후위기·에너지 전환은 10%p 하락함
- 이러한 변화는 두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AI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대 간 판단이 수렴하는 양상임. 다만 이는 AI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공론화의 의제·정보 제공 효과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2-3]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변화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AI 전환	37	48	63	+26
34세 이하	42	43	71	+29
35세 이상	36	49	61	+25
인구구조 변화	43	39	26	-17
34세 이하	37	41	21	-16
35세 이상	44	38	27	-17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19	13	9	-10
34세 이하	18	15	3	-15
35세 이상	20	12	11	-9

※ ‘차이 없다’·‘잘 모름’ 제외

4)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전체

- 숙의 이후 사회 변화의 영향을 판단하는 관점이 산업·경제와 일상의 변화에서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생활경제적 영향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일자리와 소득'은 38%에서 66%로 크게 상승한 반면 산업구조·경제성장과 개인의 삶의 방식은 감소함
- 특히, 35세 이상에서 '일자리와 소득'이 33%p 상승하여, 숙의를 통해 AI 등 사회변화를 거시경제적 변화보다 고용과 소득보장 문제로 구체화하여 인식하게 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

[표 2-4]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 (2개까지 선택, 문7 응답자 전체)

(단위 : %)

구분	T1	T2	T2-T1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	38	66	+28
34세 이하	47	65	+18
35세 이상	34	67	+33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에 영향	43	36	-7
34세 이하	44	37	-7
35세 이상	43	35	-8
국가 경쟁력에 영향	23	25	+2
34세 이하	26	28	+2
35세 이상	22	25	+3
소득·자산·기회의 격차에 영향	17	19	+2
34세 이하	12	18	+6
35세 이상	18	19	+1
복지·돌봄·의료 등 생활보장에 영향	14	17	+3
34세 이하	10	14	+4
35세 이상	16	19	+3
개인의 일상과 삶의 방식 변화	26	17	-9
34세 이하	30	23	-7
35세 이상	24	15	-9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등 지역문제에 영향	5	7	+2
34세 이하	3	3	0
35세 이상	6	9	+3
세대·계층 간 갈등에 영향	5	5	0
34세 이하	5	5	0
35세 이상	6	4	-2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	12	4	-8
34세 이하	15	3	-12
35세 이상	11	5	-6

※ 복수응답. 응답 대상은 문7에서 AI·인구구조·기후 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자(T1 222명·T2 219명)

5)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 3대 동인별

- 어떤 변화를 중요하게 보는가와 관계없이 속의 후에는 '일자리와 소득'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크게 상승함. 특히 인구구조 변화 선택자(+41%p)와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선택자(+44%p)에게서 상승 폭이 매우 큼
- 이는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와 기후위기 역시 참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일자리·소득·생활 보장의 문제로 연결되어 이해되었음을 보여줌. 다만, 기후위기 선택자는 사례수가 작아 변화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표 2-5]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 (2개까지 선택)

(단위 : %)

이유	AI 전환 (T1 106명·T2 142명)			인구구조 변화 (T1 87명·T2 57명)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T1 29명·T2 20명)		
	T1	T2	T2-T1	T1	T2	T2-T1	T1	T2	T2-T1
일자리와 소득	56	69	+13	23	64	+41	11	55	+44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41	42	+1	53	28	-25	23	15	-8
소득·자산·기회의 격차	27	25	-2	9	3	-6	3	19	+16
국가 경쟁력	14	23	+9	39	35	-4	11	12	+1
개인의 일상과 삶의 방식 변화	35	22	-13	8	3	-5	44	22	-22
복지·돌봄·의료 등 생활보장	10	7	-3	20	50	+30	9	0	-9
세대·계층 간 갈등	1	5	+4	12	6	-6	0	0	0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등 지역문제	4	3	-1	6	7	+1	4	38	+34
안전과 생활환경	6	2	-4	4	0	-4	60	31	-29

※ 복수응답

02 | 총론: AI 확대와 삶에 대한 영향 전망 (문11·12)

1) AI 관련 긍정 인식

- AI 도입 확대에 대한 긍정 평가는 95%로 매우 높은 반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긍정 영향은 82%로 상대적으로 낮음. 즉, 사회 전체 차원의 AI 수용성과 개인 차원의 체감 기대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함
- 공론화 후에도 개인 삶에 대한 긍정 전망은 전체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아, 숙의가 AI 도입 자체의 필요성은 강화했지만 AI가 개인에게 직접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확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 AI 관련 긍정 인식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AI 도입의 우리 사회 전반 확대 (긍정적)	89	89	95	+6
34세 이하	81	87	89	+8
35세 이상	92	90	96	+4
향후 10년 본인 삶에 미칠 영향 (긍정적)	84	78	82	-2
34세 이하	73	73	76	+3
35세 이상	88	80	84	-4

03 | 각론1: 일자리 위험과 기회 (문13~16)

1) 본인 일의 AI 대체 가능성과 일자리 전망 : 전체

- 전체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34세 이하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35세 이상에서 증가함
- 이에 따라 공론화 후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사라져, AI의 직무대체 위험을 특정 연령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노동시장 위험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7] 본인 일의 상당 부분이 10년 내 AI로 대체될 가능성 (높다)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대체 가능성 높다 (취업자)	57	59	63	+6
34세 이하	62	62	61	-1
35세 이상	56	58	63	+7

※ 현재 일을 하는 응답자(가중 143명) 기준.

- 정규직은 대체 가능성 인식이 오히려 소폭 낮아진 반면, 비정규·플랫폼 등에서는 51%에서 67%로 16%p 상승함
- 숙의를 통해 AI 전환의 고용위험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8] 본인 일의 상당 부분이 10년 내 AI로 대체될 가능성 (높다) : 종사형태별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대체 가능성 높다 (취업자)	57	59	63	+6
정규직	62	64	59	-3
비정규·플랫폼	51	53	67	+16

※ 현재 일을 하는 응답자(가중 143명) 기준.

취업자(가중 143명) 중 정규직 임금근로자 73명/비정규·기간제·자영업·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기타 70명

2) AI 확산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공론화 전후 56%로 변하지 않았으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극히 낮아 AI가 전체 고용을 순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형성되지 않음
- 다만, 34세 이하에서는 '감소와 증가가 비슷할 것'이 10%p 증가하여, 숙의를 거치며 일방적인 일자리 감소론보다 일자리의 소멸과 창출이 병존하는 구조변화로 보는 시각이 강화됨

[표 2-9] AI 확산이 전체 일자리에 미칠 영향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일자리가 감소할 것	56	64	56	0
34세 이하	56	57	52	-4
35세 이상	56	66	58	+2
감소·증가가 비슷할 것	36	32	41	+5
34세 이하	37	38	47	+10
35세 이상	36	30	39	+3
일자리가 증가할 것	1	1	2	+1
34세 이하	3	2	0	-3
35세 이상	1	0	3	+2

3) AI 확산에 따른 고용문제 염려

- 모든 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높으며, 특히 청년 취업기회 감소와 중장년층의 재취업·직업전환 어려움은 세대를 넘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함
- 변화 양상에서는 35세 이상이 단순·반복직과 전문직·고숙련직의 AI 대체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된 반면, 34세 이하는 불안정 고용 확대에 대한 우려가 15%p 증가함. 즉 기성세대는 직무대체 위험, 청년층은 고용의 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

[표 2-10] AI 고용문제에 대한 염려 (염려된다)

(단위 : %)

구분	T1	T2	T2-T1
청년의 취업기회 감소	86	95	+9
34세 이하	90	95	+5
35세 이상	85	95	+10
중장년층의 재취업·직업전환 곤란	86	91	+5
34세 이하	80	84	+4
35세 이상	88	94	+6
단순·반복 일자리의 AI 대체	72	83	+11
34세 이하	71	73	+2
35세 이상	72	86	+14
전문직·고숙련 일자리의 AI 대체	73	80	+7
34세 이하	74	72	-2
35세 이상	72	83	+11
임금수준의 전반적 하락	77	80	+3
34세 이하	77	77	0
35세 이상	77	81	+4
비정규직·플랫폼노동 등 불안정 고용 확대	75	78	+3
34세 이하	60	75	+15
35세 이상	80	79	-1

4) AI 확산에 따른 고용 기회 기대

- 고용위험에 대한 높은 우려와 동시에 AI가 새로운 창업과 산업·직업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숙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증가함. 이는 AI에 대한 태도가 단순한 낙관 또는 비관이 아니라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줌
- 다만 중장년 재취업·직업전환 기회 확대는 59%에 그쳐 다른 기대항목보다 낮음.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에는 기대하면서도 기존 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유지됨

[표 2-11] AI 고용 기회에 대한 기대 (기대된다)

(단위 : %)

구분	T1	T2	T2-T1
인력부족 산업·직종의 일자리 유지	76	86	+10
34세 이하	83	88	+5
35세 이상	74	85	+11
AI 활용 창업으로 새로운 기회	69	82	+13
34세 이하	68	79	+11
35세 이상	69	83	+14
새로운 산업·직업으로 일자리 증가	64	72	+8
34세 이하	66	75	+9
35세 이상	64	71	+7
새로운 직무 증가로 청년 취업기회 확대	63	68	+5
34세 이하	53	66	+13
35세 이상	66	68	+2
재교육을 통한 중장년 재취업·전환 기회 확대	56	59	+3
34세 이하	57	66	+9
35세 이상	56	57	+1

04 | 각론2: 불평등과 이익 집중 우려 (문9, 17, 20)

1) 현재 사회문제의 심각성

- 속의 후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기본서비스 격차(+20%p)와 AI 활용 격차(+18%p)가 크게 상승함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와 지역소멸은 공론화 이전부터 90% 이상으로 심각성 인식이 매우 높아 변화폭이 작았던 반면, 기본서비스와 AI 격차는 속의를 통해 새롭게 문제로 현저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서비스 격차에 대한 인식은 34세 이하 73%, 35세 이상 97%로 사후에도 상당한 세대 차이가 남아 있음

[표 2-12] 우리 사회 문제의 심각성 (심각하다)

(단위 : %)

구분	T1	T2	T2-T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92	96	+4
34세 이하	90	96	+6
35세 이상	92	96	+4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97	96	-1
34세 이하	94	95	+1
35세 이상	98	96	-2
소득·자산의 양극화	86	94	+8
34세 이하	76	90	+14
35세 이상	90	96	+6
고용불안과 일자리 격차	87	93	+6
34세 이하	89	92	+3
35세 이상	86	93	+7
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의 격차	71	91	+20
34세 이하	52	73	+21
35세 이상	78	97	+19
AI 활용 격차	70	88	+18
34세 이하	63	77	+14
35세 이상	73	92	+19
세대 간 격차와 갈등	80	87	+7
34세 이하	82	85	+3
35세 이상	79	87	+8
기후·산업전환 과정의 부담 격차	72	73	+1
34세 이하	52	61	+9
35세 이상	78	77	-1

2) AI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이익 집중 우려

- AI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높은 수준에서 추가 상승하여 86%에 이룸. 특히 34세 이하가 72%에서 85%로 13%p 상승하면서 세대 간 차이가 사실상 사라짐
- 이는 숙의가 청년층에서 특히 AI를 기술혁신뿐 아니라 분배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던 것을 시사함

[표 2-13] AI 확대 시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동의)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AI 도입 확대 시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80	83	86	+6
34세 이하	72	70	85	+13
35세 이상	82	87	86	+4

3) AI 이익의 집중 가능성

- AI의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는 9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두 세대 모두 90% 이상으로 사실상 공통된 인식임
- 따라서, 이후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새로운 분배방식 논의는 이익 집중 가능성에 대한 높은 공통인식을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14] AI 이익의 대기업·플랫폼 집중 가능성 (동의)

(단위 : %)

구분	T1	T2	T2-T1
AI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에 집중될 가능성	85	90	+5
34세 이하	90	93	+3
35세 이상	83	90	+7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3장

대응의 필요성 : 기존 제도의 한계와 기본사회



3장 대응의 필요성: 기존 제도의 한계와 기본사회

01 | 사회안전망 만족도와 현 제도의 대응 가능성 (문3, 19)

1) 사회보장체계·사회안전망 만족도

- 기존 사회안전망 만족도는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공론화 전후 변화도 거의 없음. 이는 기본사회 논의의 출발점이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 아니라 일정한 불충분성 인식에 있음을 보여줌.
- 34세 이하는 만족도가 53%로 상승한 반면 35세 이상은 40%로 변화가 없어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남.

[표 3-1] 현재 사회보장체계·사회안전망 만족도 (만족)

(단위 : %)

구분	T0	T1	T1-T0
사회보장체계·사회안전망에 만족	42	44	+2
34세 이하	46	53	+7
35세 이상	40	40	0

2)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 전체

- 현 제도가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는 숙의 후 9%p 상승했으나 51%에 그침. 즉 기존 제도의 대응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충분하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
- 34세 이하 38%, 35세 이상 56%로 차이가 나타나 청년층이 기존 제도의 대응능력을 더 낮게 평가함

[표 3-2]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동의)

(단위 : %)

구분	T1	T2	T2-T1
현 제도로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 가능	42	51	+9
34세 이하	33	38	+5
35세 이상	45	56	+11

3)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 주관적 계층별

- 특히 하층에서 대응 가능 평가가 16%p 증가하여 61%에 이른 반면 상층·중층은 50% 전후에 머물
- 따라서,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기존 제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보다는, 속의 후 현재 복지제도의 실질적 보호 기능을 재평가하는 변화가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3-3]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의 AI 변화 대응 가능성 (동의) : 주관적 계층별

(단위 : %)

구분	T1	T2	T2-T1
현 제도로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 가능	42	51	+9
상층	43	49	+6
중층	39	46	+7
하층	45	61	+16

※ 주관적 계층 = 상층(상·중상층) 47명 / 중층 102명 / 하층(중하·하층) 74명(가중 사례수)

02 | 분배체계 전환 필요성 (문18)

1) AI 확대와 분배방식

- 새로운 분배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에서 82%로 상승하여, 속의를 거치며 노동소득 중심 분배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됨
- 특히 35세 이상에서 +11%p 증가한 반면 34세 이하에서는 +6%p에 그쳐, 사후에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분배방식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표 3-4] AI 확대와 분배 방식에 대한 입장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노동소득만으로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분배 방식을 새롭게 모색	72	69	82	+10
34세 이하	72	70	78	+6
35세 이상	72	69	83	+11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 분배 체계를 계속 유지 가능	21	21	14	-7
34세 이하	19	18	21	+2
35세 이상	21	22	12	-9

※ '잘 모름' 제외

03 | 기본사회 인지도와 공감도 (문24·25)

1) 기본사회 인지도

- 공론화 이전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은 다수였으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함. 따라서 이후의 높은 기본사회 공감도는 기존의 구체적 정책지식에 기반한 고정된 태도라기보다 공론화 과정에서 내용을 접한 후 형성·확인된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 34세 이하에서는 '들어본 적 없다'가 38%로 35세 이상보다 높아 기본사회에 대한 사전 노출에서도 세대 차이가 확인됨

[표 3-5] 공론화 참여 전 기본사회 인지도 (기초조사)

(단위 : %)

구분	T0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15
34세 이하	14
35세 이상	15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몰랐다	56
34세 이하	48
35세 이상	59
들어본 적이 없다	29
34세 이하	38
35세 이상	26

2) 기본사회 공감도

-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은 T0부터 이미 91%로 매우 높았고 사후에도 93%로 변화가 크지 않음. 따라서 숙의가 기본사회에 대한 총론적 찬성을 새롭게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높은 방향성 공감을 유지·확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34세 이하 81%, 35세 이상 96%로 15%p 차이가 있어 총론적 수용성에서도 일정한 세대 차이는 남아 있음

[표 3-6]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 (공감한다)

(단위 : %)

구분	T0	T1	T2	T2-T0
기본사회의 방향에 공감	91	91	93	+2
34세 이하	81	83	81	0
35세 이상	94	93	96	+2

04 |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과 실현 전망 (문26·27)

1)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성

-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은 94%로 매우 높으며 공론화 이전부터 높았던 태도가 유지·강화됨
- 이는 AI·인구구조·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에 맞게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보완·발전시킬 필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있음을 보여줌

[표 3-7]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필요성 (동의)

(단위 : %)

구분	T1	T2	T2-T1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색 필요	90	94	+4
34세 이하	83	86	+3
35세 이상	92	97	+5

2) 기본사회 실현 전망

-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 자체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남. 실현 방향 전망이 65%에서 83%로 18%p 상승함
- 특히, 34세 이하가 49%에서 72%로 23%p 상승하여, 속의를 통해 기본사회를 추상적 구상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청년층에서 크게 나타남

[표 3-8] 기본사회 실현 전망 : 전체

(단위 : %)

구분	T1	T2	T2-T1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	65	83	+18
34세 이하	49	72	+23
35세 이상	70	87	+17
그렇지는 않을 것	18	12	-6
34세 이하	26	23	-3
35세 이상	15	9	-6

3) 기본사회 실현 전망 : 2일차 의제 분임별

- 어떤 의제를 집중 토의했는가와 관계없이 실현 전망이 모두 증가하여, 특정 정책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사회 전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
- 특히 기본서비스 분임 +21%p, 소득보장 분임 +19%p로 상승폭이 크며, 일자리 분임에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 28%에서 13%로 크게 감소하여 집중 속의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표 3-9] 기본사회 실현 전망 : 2일차 의제 분임별

(단위 : %)

구분	T1	T2	T2-T1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	65	83	+18
소득보장 분임	71	90	+19
기본서비스 분임	60	81	+21
일자리 분임	63	78	+15
그렇지는 않을 것	18	12	-6
소득보장 분임	15	10	-5
기본서비스 분임	11	14	+3
일자리 분임	28	13	-15

※ 2일차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잘 모름' 제외

05 |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와 기대·우려 (문28·29, 30·31)

1)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 기본사회의 핵심은 기본소득 하나로 수렴하지 않고, 기본서비스가 가장 높은 가운데 소득보장·지속가능성·일자리·지역기회 등이 함께 선택되는 복합적 사회구상으로 인식됨
- 세대별 차이가 특히 뚜렷함. 35세 이상에서는 기본소득이 50%까지 상승한 반면 34세 이하는 19%로 하락하고, 청년층에서는 기술혁신·새로운 도전과 지속가능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따라서 기본사회에 대한 세대 차이는 찬반보다는 '무엇을 기본사회의 핵심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표 3-10] 기본사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2개까지 선택)

(단위 : %)

구분	T1	T2	T2-T1
기본서비스(의료·주거·교육·돌봄·교통·문화)가 보장되는 사회	57	60	+3
34세 이하	54	58	+4
35세 이상	58	61	+3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38	42	+4
34세 이하	28	19	-9
35세 이상	41	50	+9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	26	28	+2
34세 이하	24	32	+8
35세 이상	27	26	-1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업전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28	24	-4
34세 이하	39	28	-11

구분	T1	T2	T2-T1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기회를 누리는 사회	25	22	-3
35세 이하	25	19	-6
34세 이하	19	24	+5
35세 이상	27	17	-10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9	10	+1
34세 이하	19	23	+4
35세 이상	6	5	-1
시민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	4	7	+3
34세 이하	4	9	+5
35세 이상	5	6	+1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6	4	-2
34세 이하	7	6	-1
35세 이상	6	4	-2
사회가 함께 만든 자산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사회	4	3	-1
34세 이하	4	0	-4
35세 이상	4	4	0

※ 복수응답.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 숙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이 35%에서 48%로 크게 상승하여 다른 조건과의 격차가 확대됨
- 이는 기본사회 논의가 가치와 권리의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행가능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줌. 특히 34세 이하에서도 +15%p 상승하여 세대에 관계없이 자원이 핵심 조건으로 부각됨

[표 3-1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단위 : %)

구분	T1	T2	T2-T1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	35	48	+13
34세 이하	32	47	+15
35세 이상	36	49	+13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 운영	25	19	-6
34세 이하	20	18	-2
35세 이상	26	19	-7
AI 등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13	16	+3
34세 이하	18	19	+1
35세 이상	11	15	+4
공정한 기회 보장	15	9	-6
34세 이하	22	8	-14

구분	T1	T2	T2-T1
35세 이상	13	9	-4
국민적 합의와 시민참여 확대	12	8	-4
34세 이하	7	8	+1
35세 이상	14	8	-6

3) 기본사회 정책 확대에 대한 기대

- 기본사회 정책의 기대효과는 모든 항목에서 숙의 후 10%p 안팎 상승하여, 공론화를 거치며 정책의 구체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이해가 높아짐
- 특히, 생활안정(+14%p), 지역과 무관한 서비스 접근(+13%p), 재교육·이직·창업 지원(+11%p)이 크게 상승하여 기본사회를 수동적 소득보장보다는 위험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전환 지원체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표 3-12] 기본사회 정책 확대 시 기대 (동의)

(단위 : %)

구분	T1	T2	T2-T1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	82	93	+11
34세 이하	82	92	+10
35세 이상	82	93	+11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	77	91	+14
34세 이하	73	89	+16
35세 이상	78	92	+14
복지 사각지대와 소득·기회 격차 축소에 도움	76	87	+11
34세 이하	78	86	+8
35세 이상	76	88	+12
돌봄·환경 등 저평가된 일이 제대로 평가받는 데 도움	76	86	+10
34세 이하	73	87	+14
35세 이상	77	86	+9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서비스 이용이 쉬워짐	71	84	+13
34세 이하	77	86	+9
35세 이상	69	83	+14

4) 기본사회 정책 확대에 대한 우려

- 정책 기대가 높아진 것과 동시에 세금부담과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함. 즉 정책에 대한 기대와 비용·운영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남
- 특히, 세금부담 우려는 90%로 가장 높고 미래세대 부담도 71%에 달해, 기본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필요성 못지않게 자원과 세대 간 부담의 정당성이 중요함

[표 3-13] 기본사회 정책 확대 시 우려 (염려)

(단위 : %)

구분	T1	T2	T2-T1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	83	90	+7
34세 이하	90	95	+5
35세 이상	81	88	+7
공동자산·공공기금의 정치적 운용이나 투자손실	75	80	+5
34세 이하	79	85	+6
35세 이상	74	78	+4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71	71	0
34세 이하	77	80	+3
35세 이상	69	68	-1
근로이익 저하	59	62	+3
34세 이하	71	65	-6
35세 이상	55	61	+6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 부족	60	61	+1
34세 이하	71	65	-6
35세 이상	57	59	+2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공론화

4장

대응 수단에 대한 선호



4장 대응 수단에 대한 선호

01 | 일자리와 직업전환 (문21, 40~44)

1) 고용위험 대응의 책임 주체 : 전체

- AI 고용위험을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기업과 사회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숙의 후 크게 강화되어 78%에 이름
- 이는 AI 전환에 따른 고용위험을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위험으로 보는 관점이 숙의를 통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1] AI 등 고용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T1	T2	T2-T1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이므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분담	63	78	+15
34세 이하	50	64	+14
35세 이상	67	83	+16
각 개인이 능력과 기술을 높여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우선	30	22	-8
34세 이하	40	36	-4
35세 이상	27	17	-10

※ '잘 모름' 제외

2) 고용위험 대응의 책임 주체 : 2일차 의제 분임별

- 모든 분임에서 사회적 위험분담 선호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일자리 분임에서 58%→86%로 28%p 상승함
- 해당 문제를 직접 숙의한 집단에서 변화가 가장 컸다는 점은 구체적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안을 검토할수록 공동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줌

[표 4-2] AI 등 고용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 : 2일차 의제 배너

(단위 : %)

구분	T1	T2	T2-T1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이므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분담	63	78	+15
소득보장 분임	66	75	+9
기본서비스 분임	64	75	+11
일자리 분임	58	86	+28
각 개인이 능력과 기술을 높여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우선	30	22	-8
소득보장 분임	30	25	-5
기본서비스 분임	30	25	-5
일자리 분임	29	14	-15

※ 2일차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잘 모름’ 제외

3) 일자리·직업전환 대응 정책 동의도

- 구직·전환교육, 기업 책임, 노동시간 단축, 공공일자리 모두 사후 80% 이상으로 높은 동의를 형성하여 일자리 대응정책 전반에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됨
- 특히, 공공일자리 제공은 +13%p, 34세 이하에서는 +17%p 상승하여 속의 후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수용성이 확대됨

[표 4-3] 일자리·직업전환 정책에 대한 동의 (동의)

(단위 : %)

구분	T1	T2	T2-T1
구직·직업전환 관련 교육 지원 필요	93	96	+3
34세 이하	90	97	+7
35세 이상	94	96	+2
고용변화 시 기업이 재교육·고용전환 지원에 더 큰 책임	90	93	+3
34세 이하	80	89	+9
35세 이상	94	94	0
생산성 향상 일부를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에 활용	82	90	+8
34세 이하	65	79	+14
35세 이상	88	93	+5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과 적정 임금 제공	70	83	+13
34세 이하	58	75	+17
35세 이상	74	86	+12

4)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방안

-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노동시간만큼 삭감하는 양극단보다 생산성 향상을 반영해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조정하는 절충적 방안으로 의견이 집중됨
- 특히, 34세 이하에서 이 방안이 22%p 증가하고 업종·기업별 차등 적용은 15%p 감소하여, 숙의를 통해 복잡한 차등 적용보다 일정한 공통원칙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동함.

[표 4-4]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 방안

(단위 : %)

구분	T1	T2	T2-T1
생산성 향상을 감안해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조정	45	58	+13
34세 이하	30	52	+22
35세 이상	50	60	+10
기존 임금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	21	20	-1
34세 이하	17	17	0
35세 이상	22	21	-1
기업 규모·업종·생산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20	18	-2
34세 이하	38	23	-15
35세 이상	14	16	+2
줄어든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도 축소	11	4	-7
34세 이하	11	6	-5
35세 이상	11	3	-8

※ '잘 모름' 제외

02 | 기본서비스에 대한 인식 (문37~39)

1) 기본서비스별 기본보장 필요성

- 의료·교육·일자리·돌봄·주거 등 주요 기본서비스는 모두 90% 이상으로, 무엇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공통분모가 형성되어 있음
- 의료와 돌봄은 애초부터 높은 수준이라 변화폭이 작았고, 교육과 주거가 각각 7%p, 8%p 상승하여 속익을 통해 기본서비스의 범위가 보다 폭넓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화는 전체 74%, 특히 34세 이하 61%로 상대적으로 낮아 서비스의 기본성에 대한 합의 수준에는 영역별 차이가 존재함

[표 4-5] 서비스별 기본 보장의 필요성 (필요하다)

(단위 : %)

구분	T1	T2	T2-T1
의료	97	98	+1
34세 이하	99	99	0
35세 이상	97	98	+1
교육	91	98	+7
34세 이하	98	99	+1
35세 이상	89	97	+8
일자리	92	96	+4
34세 이하	92	98	+6
35세 이상	92	95	+3
돌봄	96	95	-1
34세 이하	92	94	+2
35세 이상	98	96	-2
주거	85	93	+8
34세 이하	87	94	+7
35세 이상	85	93	+8
교통	88	90	+2
34세 이하	79	80	+1
35세 이상	90	93	+3
에너지	88	88	0
34세 이하	80	82	+2
35세 이상	91	90	-1
통신	79	84	+5
34세 이하	76	81	+5
35세 이상	80	85	+5
문화	71	74	+3
34세 이하	54	61	+7
35세 이상	76	78	+2

2)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 전체

- 필요성에서는 대부분 서비스에 높은 동의를 보였지만, 우선순위를 제한하자 의료·주거·일자리·돌봄에 선택이 집중됨. 즉 '필요한 서비스'와 '우선 투자할 서비스'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돌봄으로 35%에서 50%로 15%p 증가했으며, 특히 35세 이상에서 +19%p임. 숙의를 통해 돌봄이 부가적 복지가 아니라 핵심 기본서비스로 부상함
- 34세 이하는 주거·일자리·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35세 이상은 돌봄을 더 중시하는 세대별 생활주기 차이도 확인됨.

[표 4-6]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3개 선택)

(단위 : %)

구분	T1	T2	T2-T1
의료	85	86	+1
34세 이하	86	82	-4
35세 이상	85	88	+3
주거	56	52	-4
34세 이하	68	56	-12
35세 이상	52	50	-2
일자리	55	51	-4
34세 이하	50	55	+5
35세 이상	56	50	-6
돌봄	35	50	+15
34세 이하	26	29	+3
35세 이상	38	57	+19
교육	36	36	0
34세 이하	46	48	+2
35세 이상	33	31	-2
교통	16	12	-4
34세 이하	9	11	+2
35세 이상	18	12	-6
에너지	10	6	-4
34세 이하	9	9	0
35세 이상	11	6	-5
문화	2	4	+2
34세 이하	1	5	+4
35세 이상	3	4	+1
통신	4	3	-1
34세 이하	4	4	0
35세 이상	4	3	-1

※ 복수응답.

3)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 2일차 의제 분임별

- 돌봄의 우선순위 상승은 특정 분임에 국한되지 않고 소득보장 분임 +22%p, 기본서비스 분임 +16%p, 일자리 분임 +6%p로 나타나 속의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임
- 반면, 일자리는 일자리 분임에서만 +9%p 상승하고 다른 분임에서는 감소하여, 집중적으로 다른 의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일부 달라지는 의제 속의 효과도 확인됨

[표 4-7]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기본서비스 (3개 선택) : 2일차 의제 분임별

(단위 : %)

구분	T1	T2	T2-T1
의료	85	86	+1
소득보장 분임	83	86	+3
기본서비스 분임	88	81	-7
일자리 분임	84	92	+8
주거	56	52	-4
소득보장 분임	63	48	-15
기본서비스 분임	45	51	+6
일자리 분임	61	57	-4
일자리	55	51	-4
소득보장 분임	56	47	-9
기본서비스 분임	55	46	-9
일자리 분임	53	62	+9
돌봄	35	50	+15
소득보장 분임	32	54	+22
기본서비스 분임	42	58	+16
일자리 분임	31	37	+6
교육	36	36	0
소득보장 분임	36	36	0
기본서비스 분임	32	35	+3
일자리 분임	41	35	-6
교통	16	12	-4
소득보장 분임	19	15	-4
기본서비스 분임	18	13	-5
일자리 분임	11	8	-3
에너지	10	6	-4
소득보장 분임	5	4	-1
기본서비스 분임	11	7	-4
일자리 분임	15	7	-8
문화	2	4	+2
소득보장 분임	4	9	+5
기본서비스 분임	1	1	0
일자리 분임	2	1	-1
통신	4	3	-1
소득보장 분임	1	0	-1
기본서비스 분임	9	8	-1
일자리 분임	2	1	-1

※ 복수응답. 2일차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4) 기본서비스 정부 지출 성격에 대한 입장 : 전체

- 기본서비스 지출을 단순한 복지비용보다 건강·고용·교육·지역경제 등에 효과를 내는 '사회적 투자'로 보는 시각이 78%까지 증가함
- 특히, 35세 이상에서는 82%로 높으며, 34세 이하에서도 57%에서 66%로 상승하여 기본서비스를 소비성 지출보다 미래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높이는 투자로 이해하는 방향이 강화됨

[표 4-8] 기본서비스 정부지출의 성격에 대한 입장

(단위 : %)

구분	T1	T2	T2-T1
복지인 동시에 건강·고용·교육·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투자	70	78	+8
34세 이하	57	66	+9
35세 이상	75	82	+7
주로 정부의 복지비용을 늘리는 지출	22	21	-1
34세 이하	34	32	-2
35세 이상	17	17	0

※ '잘 모름' 제외

5) 기본서비스 정부 지출 성격에 대한 입장 : 2일차 의제 분임별

-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은 모든 분임에서 우세하며, 특히 소득보장 분임에서 73%→86%로 가장 크게 상승함
- 이는 소득보장을 집중 논의한 참여자에게도 기본서비스가 현금급여와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득·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상호보완적 투자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함

[표 4-9] 기본서비스 정부지출의 성격에 대한 입장 : 2일차 의제 분임별

(단위 : %)

구분	T1	T2	T2-T1
복지인 동시에 건강·고용·교육·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투자	70	78	+8
소득보장 분임	73	86	+13
기본서비스 분임	70	74	+4
일자리 분임	68	74	+6
주로 정부의 복지비용을 늘리는 지출	22	21	-1
소득보장 분임	14	12	-2
기본서비스 분임	22	24	+2
일자리 분임	29	26	-3

※ 2일차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잘 모름' 제외

03 | 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문32~36)

1) 소득보장 대상에 대한 입장

- 소득보장은 보편적 기본보장이 60%로 선별지원 39%보다 우세하지만, 다른 기본사회 정책처럼 80~90% 수준의 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특히, 34세 이하에서는 보편 51%, 선별 47%로 사실상 양분되어 있어 보편 대 선별은 기본사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숙의가 필요한 핵심 쟁점임

[표 4-10] 소득보장 대상에 대한 입장

(단위 : %)

구분	T1	T2	T2-T1
누구나 위험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본을 보장 (보편)	57	60	+3
34세 이하	49	51	+2
35세 이상	60	63	+3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소득·고위험층에 지원 집중 (선별)	37	39	+2
34세 이하	41	47	+6
35세 이상	36	36	0

※ 34세 이하·35세 이상은 가중 사례수 56명·167명. '잘 모름' 제외

2)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입장 : 전체

- 단순 생존 수준보다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6%로 우세하고 숙의 후에도 증가함
- 다만, 세대별로는 34세 이하가 51%, 35세 이상이 70%로 차이가 커, 34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수준 보장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임

[표 4-11]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입장 : 전체

(단위 : %)

구분	T1	T2	T2-T1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정 수준	61	66	+5
34세 이하	42	51	+9
35세 이상	67	70	+3
최소한 생존이 가능한 수준	35	31	-4
34세 이하	50	47	-3
35세 이상	29	25	-4

※ 34세 이하·35세 이상은 가중 사례수 56명·167명. '잘 모름' 제외

3)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입장 : 주관적 계층별

- 계층별 변화 방향은 매우 상이함. 상층은 적정수준 보장이 60%→45%로 감소하고 최소 생존수준이 55%로 상승한 반면, 중층은 적정수준 보장이 16%p 증가함
- 이는 소득보장의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위치와 부담·수혜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4-12]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의견 : 주관적 계층

(단위 : %)

구분	T1	T2	T2-T1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정 수준	61	66	+5
상층	60	45	-15
중층	52	68	+16
하층	73	75	+2
최소한 생존이 가능한 수준	35	31	-4
상층	35	55	+20
중층	42	31	-11
하층	25	15	-10

※ 주관적 계층=상층(상·중상층) 47명 / 중층 102명 / 하층(중하·하층) 74명(가중 사례수). '잘 모름' 제외

4) 활동 기간 소득보장과 확대 필요성

- 돌봄 94%, 재교육·훈련 92%, 구직·직업전환 84%로, 전통적 실업상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나 전환 기간까지 소득보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됨
- 34세 이하에서는 환경·생태보전 활동이 +13%p, 재교육·훈련 +9%p, 구직·전환 +8%p로 상승하여 청년층에서 '활동과 전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대적으로 큼

[표 4-13] 활동 기간 중 소득보장 필요성 (동의)

(단위 : %)

구분	T1	T2	T2-T1
가족이나 지역사회 돌봄 기간	89	94	+5
34세 이하	82	89	+7
35세 이상	92	95	+3
새로운 직업을 위한 재교육·훈련 기간	87	92	+5
34세 이하	80	89	+9
35세 이상	89	92	+3
구직·직업전환 기간	82	84	+2
34세 이하	80	88	+8
35세 이상	82	83	+1
환경·생태보전 활동	75	78	+3
34세 이하	57	70	+13
35세 이상	81	81	0
공익적 지역사회 활동	72	76	+4
34세 이하	56	65	+9
35세 이상	77	80	+3

5) 농어촌 기본소득 향후 방향

- 점차 확대 시행 의견이 40%에서 53%로 상승하고 축소·폐지는 감소하여 속의 이후 정책 확대 쪽으로 이동함

[표 4-14] 농어촌 기본소득의 향후 방향

(단위 : %)

구분	T1	T2	T2-T1
점차 확대 시행	40	53	+13
34세 이하	23	35	+12
35세 이상	46	59	+13
현재 수준 유지	31	34	+3
34세 이하	43	39	-4
35세 이상	28	32	+4
축소하거나 폐지	17	10	-7
34세 이하	28	22	-6
35세 이상	13	6	-7

※ '잘 모름' 제외

6)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 전체

- 특정 하나의 제도로 수렴하지 않고 참여소득, 전환기 소득지원, 사회보험, 선별지원, 기본소득이 모두 30% 전후로 분산되어 소득보장의 구체적 방식에는 아직 뚜렷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음
- 청년층에서는 참여소득이 20%p 감소한 반면 사회보험 강화가 16%p, 전환기 소득지원이 9%p 상승함. 이는 청년층의 선호가 '활동에 대한 새로운 급여'보다 기존 사회보험 및 고용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줌
- 기술발전 성과를 나누는 사회배당은 전체 -10%p, 35세 이상 -13%p로 감소하여 AI 성과환원을 곧바로 개인배당과 연결하는 선호는 오히려 약화됨

[표 4-15]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2개 선택)

(단위 : %)

구분	T1	T2	T2-T1
돌봄·환경·지역활동 등에 지급하는 참여소득	43	39	-4
34세 이하	50	30	-20
35세 이상	41	43	+2
재교육·구직·직업전환 기간의 전환기 소득지원	37	37	0
34세 이하	33	42	+9
35세 이상	38	35	-3
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험 강화	30	32	+2
34세 이하	25	41	+16
35세 이상	31	30	-1

구분	T1	T2	T2-T1
저소득·고위험층에 대한 집중지원	32	31	-1
34세 이하	36	30	-6
35세 이상	31	31	0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27	31	+4
34세 이하	24	23	-1
35세 이상	29	34	+5
햇빛·바람·토지 등 수익을 나누는 소득지원	6	13	+7
34세 이하	8	9	+1
35세 이상	5	14	+9
청년·예술인·농어민 등 특정 계층 기본소득	7	9	+2
34세 이하	12	15	+3
35세 이상	5	7	+2
기술발전의 성과를 나누는 사회배당	18	8	-10
34세 이하	12	10	-2
35세 이상	20	7	-13

※ 복수응답.

7)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 2일차 의제 분임별

- 소득보장 분임에서는 기본소득이 21%→36%로 15%p 상승한 반면 참여소득은 11%p 감소하여, 해당 의제를 집중적으로 숙의한 경우에도 소득보장 방식의 우선순위가 재구성됨.
- 일자리 분임에서는 전환기 소득지원이 45%로 가장 높아, 숙의 의제에 따라 소득보장의 의미가 달라짐. 즉 기본소득·참여소득·전환소득 가운데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기보다 정책문제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구조임.

[표 4-16]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 (2개 선택) : 2일차 의제 분임

(단위 : %)

구분	T1	T2	T2-T1
돌봄·환경·지역활동 등에 지급하는 참여소득	43	39	-4
소득보장 분임	51	40	-11
기본서비스 분임	37	38	+1
일자리 분임	42	41	-1
재교육·구직·직업전환 기간의 전환기 소득지원	37	37	0
소득보장 분임	33	37	+4
기본서비스 분임	35	31	-4
일자리 분임	44	45	+1
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험 강화	30	32	+2
소득보장 분임	22	31	+9
기본서비스 분임	35	37	+2
일자리 분임	32	29	-3
저소득·고위험층에 대한 집중지원	32	31	-1
소득보장 분임	35	26	-9

구분	T1	T2	T2-T1
기본서비스 분임	35	33	-2
일자리 분임	26	34	+8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27	31	+4
소득보장 분임	21	36	+15
기본서비스 분임	31	29	-2
일자리 분임	30	27	-3
햇빛·바람·토지 등 수익을 나누는 소득지원	6	13	+7
소득보장 분임	7	12	+5
기본서비스 분임	6	15	+9
일자리 분임	5	11	+6
청년·예술인·농어민 등 특정 계층 기본소득	7	9	+2
소득보장 분임	11	13	+2
기본서비스 분임	4	8	+4
일자리 분임	5	5	0
기술발전의 성과를 나누는 사회배당	18	8	-10
소득보장 분임	20	5	-15
기본서비스 분임	17	11	-6
일자리 분임	16	8	-8

※ 복수응답. 2일자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공론화

5장

자원 마련과 재투자



5장 자원 마련과 재투자

01 |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 (문22, 45-4, 52)

1) AI 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입장 : 전체

- AI 이익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 세금·사회기여 방식 재원화가 각각 89%, 83%로 높아, AI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34세 이하에서는 각각 78%, 69%로 35세 이상보다 낮아, 청년층이 AI 산업에 대한 추가적 부담 부과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임

[표 5-1] AI 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인식 (동의·필요)

(단위 : %)

구분	T1	T2	T2-T1
AI·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여 확대 (재원 방안)	87	89	+2
34세 이하	71	78	+7
35세 이상	92	92	0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 이익 일부를 세금·사회기여로 확보해 고용·소득·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	81	83	+2
34세 이하	62	69	+7
35세 이상	87	88	+1
AI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	78	78	0
34세 이하	71	74	+3
35세 이상	80	79	-1

2) AI 이익의 사회 환원에 대한 입장 : 주관적 계층별

-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동의가 높아, 특히 하층에서는 사회적 기여 확대 96%, 세금·사회기여 재원화 95%에 이름
- 이는 AI 성과의 분배에 대한 태도가 AI에 대한 일반적 찬반보다 경제적 이익의 귀속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될 가능성을 보여줌.

[표 5-2]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인식 (동의·필요) : 주관적 계층

(단위 : %)

구분	T1	T2	T2-T1
AI·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여 확대 (재원 방안)	87	89	+2
상층	76	84	+8
중층	87	86	-1
하층	94	96	+2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 이익 일부를 세금·사회기여로 확보해 고용·소득·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	81	83	+2
상층	74	74	0
중층	79	79	0
하층	88	95	+7
AI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	78	78	0
상층	73	76	+3
중층	78	76	-2
하층	80	81	+1

※ 주관적 계층 = 상층(상·중상층) 47명 / 중층 102명 / 하층(중하·하층) 74명(가중 사례수)

02 | 재원 방안과 추가 부담 의향 (문45·46, 31-1)

1) 재원 마련 방안 필요성 공감도

- 공공자산 수익, 재정 비효율 정비, 초과세수·개발이익 적립 등은 90%대의 매우 높은 동의를 보인 반면, 조세부담 확대는 79%로 상대적으로 낮음
- 즉, 국민은 기본사회 재원 확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추가조세보다 기존 공공자산의 활용, 비효율 제거, 초과재원의 축적을 먼저 활용하는 방식을 더 선호함
- 특히 '비과세·감면 및 중복·비효율 정비'가 12%p 상승한 것은 속의를 거치며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기 전에 기존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됨

[표 5-3] 기본사회 재원 마련 방안별 필요성 (필요하다)

(단위 : %)

구분	T1	T2	T2-T1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	95	98	+3
34세 이하	87	93	+6
35세 이상	98	99	+1
비과세·감면 정비, 복지·재정사업 중복·비효율 축소	85	97	+12
34세 이하	87	98	+11
35세 이상	85	97	+12

구분	T1	T2	T2-T1
초과세수·개발이익 일부를 미래기금·공동자산으로 적립	96	96	0
34세 이하	89	92	+3
35세 이상	98	97	-1
탄소배출 등 사회적 비용 발생 활동에 대한 부담 확대	85	91	+6
34세 이하	77	82	+5
35세 이상	88	94	+6
AI·첨단기술 이익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여 확대	87	89	+2
34세 이하	71	78	+7
35세 이상	92	92	0
소득과 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78	79	+1
34세 이하	61	68	+7
35세 이상	84	83	-1

2)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 전체

-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은 54%→59%로 증가했으나 60%에 못 미쳐, 재원 마련 필요성에 대한 높은 동의가 자신의 직접적 추가 부담 의향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 34세 이하는 부담 의향 49%로 반대 40%와 차이가 크지 않아, 청년층에서 추가 부담은 특히 합의가 부족한 쟁점임

[표 5-4]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단위 : %)

구분	T1	T2	T2-T1
부담할 의향이 있다	54	59	+5
34세 이하	41	49	+8
35세 이상	58	63	+5
부담할 의향이 없다	31	31	0
34세 이하	41	40	-1
35세 이상	28	28	0
잘 모르겠다	15	10	-5
34세 이하	18	11	-7
35세 이상	14	9	-5

3)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 주관적 계층별

- 추가 부담 의향은 하층 66%, 중층 62%, 상층 44%로 오히려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특히 중층에서는 +11%p 상승한 반면 상층에서는 -5%p 감소하여, 추가 부담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부담능력보다 기본사회의 필요성·수혜 기대·재분배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표 5-5]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 주관적 계층

(단위 : %)

구분	T1	T2	T2-T1
부담할 의향이 있다	54	59	+5
상층	49	44	-5
중층	51	62	+11
하층	60	66	+6
부담할 의향이 없다	31	31	0
상층	42	45	+3
중층	26	27	+1
하층	31	28	-3
잘 모르겠다	15	10	-5
상층	9	11	+2
중층	23	11	-12
하층	9	6	-3

※ 주관적 계층 = 상층(상·중상층) 47명 / 중층 102명 / 하층(중하·하층) 74명(가중 사례수)

4)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 추가 부담 의향이 증가했음에도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90%로 상승함. 이는 서로 모순되기보다 필요하다면 부담할 수 있지만 부담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갖는 조건부 수용 태도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원 논의에서는 부담 여부분 아니라 부담수준, 부담주체, 사용처, 운영의 투명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표 5-6]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염려)

(단위 : %)

구분	T1	T2	T2-T1
기본사회 확대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83	90	+7
34세 이하	90	95	+5
35세 이상	81	88	+7

03 | 자원 사용처 (문23, 47·48)

1) AI 관련 자원의 우선 사용 분야

- 가장 큰 변화는 기본서비스 확충이 25%에서 46%로 21%p 상승하고 미래대응기금이 16%p 상승한 것임. 반면 사회보험 재정 확충, AI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은 하락함
- 즉, 숙의를 거치며 AI 관련 자원을 여러 현안에 분산하기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서비스와 장기적 공동자산 형성이라는 두 축에 집중하려는 방향이 강화됨.
- 청년층은 여전히 AI·첨단기술 연구개발 투자 36%로 기성세대 18%보다 높아, 자원의 미래투자 방식에서도 세대별 우선순위 차이가 확인됨.

[표 5-7] AI 관련 자원의 우선 사용 분야 (2개까지 선택)

(단위 : %)

구분	T1	T2	T2-T1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	25	46	+21
34세 이하	19	38	+19
35세 이상	27	49	+22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	38	38	0
34세 이하	36	31	-5
35세 이상	38	40	+2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형성	14	30	+16
34세 이하	9	23	+14
35세 이상	16	32	+16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32	29	-3
34세 이하	20	20	0
35세 이상	36	32	-4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 투자	27	22	-5
34세 이하	45	36	-9
35세 이상	21	18	-3
지역균형발전 투자	17	11	-6
34세 이하	22	20	-2
35세 이상	15	8	-7
AI 격차 해소	19	11	-8
34세 이하	29	19	-10
35세 이상	16	8	-8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확충	18	8	-10
34세 이하	13	8	-5
35세 이상	20	8	-12

2)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전체

- 일시적 재원을 당장 소비하거나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투자를 위해 기금·공동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46%에서 61%로 상승함
- 특히, 부채상환 선호가 24%→11%로 크게 감소하여, 속의 후 재정 여력을 과거 부채의 정리보다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동함

[표 5-8]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단위 : %)

구분	T1	T2	T2-T1
미래위기 대응·장기투자를 위해 기금·공동자산으로 남김	46	61	+15
34세 이하	49	59	+10
35세 이상	45	62	+17
현재 국민의 생활지원과 기본서비스에 사용	27	27	0
34세 이하	17	21	+4
35세 이상	31	29	-2
나라의 부채 상환에 사용	24	11	-13
34세 이하	28	19	-9
35세 이상	23	9	-14

3)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2일차 의제 분임별

- 미래기금·공동자산 선호는 세 분임 모두 증가했으며 일자리 분임에서 +23%p로 가장 큼
- 따라서 미래투자 선호는 미래기금 의제를 직접 다룬 특정 집단에 한정된 현상이라기보다 다른 정책영역을 숙의한 참여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음

[표 5-9] 일시적 추가재원의 바람직한 사용 방향 : 2일차 의제

(단위 : %)

구분	T1	T2	T2-T1
미래위기 대응·장기투자를 위해 기금·공동자산으로 남김	46	61	+15
소득보장 분임	39	55	+16
기본서비스 분임	51	59	+8
일자리 분임	48	71	+23
현재 국민의 생활지원과 기본서비스에 사용	27	27	0
소득보장 분임	33	36	+3
기본서비스 분임	22	25	+3
일자리 분임	27	19	-8
나라의 부채 상환에 사용	24	11	-13
소득보장 분임	25	10	-15
기본서비스 분임	23	15	-8
일자리 분임	24	10	-14

※ 2일차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잘 모름' 제외

4)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 전체

- 공동자산 투자수익을 즉시 환원하기보다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49%에서 67%로 18%p 상승하면서 사후에는 뚜렷한 다수의견이 됨
- 특히, 34세 이하에서는 재투자 선호가 73%까지 상승하여, 청년층이 기본소득 등 현재소득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하면서도 장기적인 공동자산 축적에는 오히려 적극적인 특징을 보임

[표 5-10]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단위 : %)

구분	T1	T2	T2-T1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공동자산에 재투자	49	67	+18
34세 이하	51	73	+22
35세 이상	48	65	+17
현재 국민에게 기본서비스·시민배당으로 환원	48	32	-16
34세 이하	44	26	-18
35세 이상	49	34	-15

※ '잘 모름' 제외

5)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 2일차 의제 분임별

- 재투자 선호는 모든 분임에서 증가하며 특히 기본서비스 분임 +22%p, 일자리 분임 +21%p로 크게 상승함.
- 이는 숙의 후 '현재 세대에 즉시 배분'보다 '자산을 키워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세대 간 장기 관점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결과임

[표 5-11]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바람직한 처리 방향 : 2일차 의제 배너

(단위 : %)

구분	T1	T2	T2-T1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공동자산에 재투자	49	67	+18
소득보장 분임	48	60	+12
기본서비스 분임	43	65	+22
일자리 분임	57	78	+21
현재 국민에게 기본서비스·시민배당으로 환원	48	32	-16
소득보장 분임	47	40	-7
기본서비스 분임	54	35	-19
일자리 분임	42	21	-21

※ 2일차 분임토의에서 해당 영역을 토의한 참여자(가중 사례수 소득보장 77명·기본서비스 77명·일자리 69명). '잘 모름' 제외

04 | 운용 원칙과 신뢰 (문49, 31-5)

1) 국부펀드·국민 공동자산 운영의 원칙

- 미래세대 자산보전 36%, 독립·전문적 운영 35%, 투명성 24%로 선호가 분산되어 특정 하나의 운영원칙에 합의가 형성되지는 않음
- 34세 이하는 투명성을 38%로 가장 중시한 반면 35세 이상은 자산보전 39%, 독립·전문운영 36%가 높아, 청년은 과정의 투명성, 기성세대는 안정적 자산관리와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차이가 나타남

[표 5-12] 국부펀드·국민 공동자산 운영의 원칙

(단위 : %)

구분	T1	T2	T2-T1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한 미래세대 자산 보전	34	36	+2
34세 이하	27	26	-1
35세 이상	37	39	+2
정부·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산 운영	31	35	+4
34세 이하	28	33	+5
35세 이상	32	36	+4
투자 내용과 성과의 투명성	26	24	-2
34세 이하	40	38	-2
35세 이상	22	20	-2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성과 공유	7	4	-3
34세 이하	2	3	+1
35세 이상	8	4	-4

※ '잘 모름' 제외

2) 공동자산·공공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

- 공동자산 확대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별개로 정치적 운용과 투자손실 우려도 80%로 높음
- 이는 공동자산에 대한 지지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라는 제도적 안전 장치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지임을 보여줌

[표 5-13] 공동자산·공공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 (염려)

(단위 : %)

구분	T1	T2	T2-T1
공동자산·공공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75	80	+5
34세 이하	79	85	+6
35세 이상	74	78	+4

05 |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인식 (문50-51)

1)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

-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은 95%로 매우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히 34세 이하에서 10%p 증가해 91%에 이름
- 미래세대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에도 기금 조성에는 높은 동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은 현재의 재원을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세대 간 위험분산 장치 자체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5-14]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 (필요하다)

(단위 : %)

구분	T1	T2	T2-T1
초과세수·잉여금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91	95	+4
34세 이하	81	91	+10
35세 이상	94	96	+2

2)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사용 목적

- 기금 조성 자체에는 거의 합의가 형성된 반면 사용처는 미래 성장동력 38%, 재정안정 36% 등으로 분산됨. 즉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와 기금 사용방향에 대한 합의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숙의를 거치며 미래 성장동력 투자가 증가하고 재정안정은 다소 감소하여, 기금을 단순한 경기대응용 적립금보다 미래 생산성과 성장기반을 만드는 투자재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화됨

[표 5-15] 미래대응기금의 우선 사용 목적

(단위 : %)

구분	T1	T2	T2-T1
AI·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30	38	+8
34세 이하	25	35	+10
35세 이상	32	39	+7
경기 악화에 대비한 재정 안정	38	36	-2
34세 이하	44	37	-7
35세 이상	37	35	-2
청년의 미래 기회 확대	10	12	+2
34세 이하	9	11	+2
35세 이상	11	12	+1
교육·인재 양성 투자	8	8	0
34세 이하	9	10	+1
35세 이상	7	7	0
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10	6	-4
34세 이하	7	6	-1
35세 이상	11	6	-5

※ '잘 모름' 제외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6장

공론화 과정 평가



6장 공론화 과정 평가

01 | 공론화 과정의 도움 정도와 학습 (문53·54)

1)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 전체 공론화 과정 97%, 분임토의 95%, 자료집·이러닝·전문가 발표·참여자 의견교환이 모두 94%로, 공론화의 주요 구성요소 대부분이 판단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전문가 질의응답은 85%, 홈페이지·Q&A·자료실은 71%로 상대적으로 낮아, 대면 숙의와 구조화된 정보제공에 비해 보조적 정보채널의 활용성과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특히, 홈페이지·Q&A·자료실은 34세 이하 61%로 낮아 온라인 채널이 청년층에게 자동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확인되지 않음

[표 6-1] 공론화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 정도 (도움이 되었다)

(단위 : %)

구분	T2
전체 공론화 과정	97
34세 이하	94
35세 이상	98
분임토의	95
34세 이하	90
35세 이상	96
자료집	94
34세 이하	88
35세 이상	96
이러닝·동영상 자료	94
34세 이하	87
35세 이상	97
전문가 발표	94
34세 이하	91
35세 이상	95
다른 참여자들과의 의견교환	94
34세 이하	94
35세 이상	94

구분	T2
전문가 질의응답	85
34세 이하	78
35세 이상	88
홈페이지·Q&A·자료실	71
34세 이하	61
35세 이상	74

2) 공론화 자료 학습 정도

- 이러닝·동영상의 완전 학습률이 89%로 자료집 78%보다 높아, 사전학습에서는 영상 기반 콘텐츠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두 자료 모두 35세 이상에서 학습률이 높아, 34세 이하의 사전학습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자료형식·분량·접근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표 6-2] 공론화 자료 학습 정도 (모두 보았다)

(단위 : %)

구분	T2
이러닝·동영상 자료	89
34세 이하	82
35세 이상	92
자료집	78
34세 이하	69
35세 이상	81

02 | 자료집·전문가 발표·분임토의 평가 (문55~57)

1) 자료집 평가

- 자료집의 적절성과 이해가능성, 생각 정리 도움은 모두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됨.
- 반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의 균형'은 83%, 특히 34세 이하에서 73%로 상대적으로 낮아 자료의 정보성·이해가능성은 높았지만 관점의 균형성에서는 개선 여지가 확인됨.

[표 6-3] 자료집 평가 (그렇다)

(단위 : %)

구분	T2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	96
34세 이하	92
35세 이상	97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	94
34세 이하	94
35세 이상	94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	92
34세 이하	88
35세 이상	94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가 균형 있게 구성	83
34세 이하	73
35세 이상	87

2)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

- 전문가 발표 자체는 이해도와 내용 적절성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으나, 질의응답 관련 평가는 80%대, 충분한 시간은 67%로 크게 낮아짐
- 따라서, 전문가 세션의 문제는 발표내용보다 참여자가 자신의 의문을 제기하고 충분히 답변을 받는 상호작용 시간의 부족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34세 이하에서 '생각 정리에 도움' 77%, '답변 적절' 76%로 기성세대보다 낮아 청년층의 질문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는 질의응답 설계가 요구됨

[표 6-4]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평가 (그렇다)

(단위 : %)

구분	T2
발표는 이해하기 쉬웠다	94
34세 이하	96
35세 이상	94
발표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	93
34세 이하	93
35세 이상	93
발표와 질의응답이 생각 정리에 도움	85
34세 이하	77
35세 이상	87
참여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적절	84
34세 이하	76
35세 이상	87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	67
34세 이하	64
35세 이상	68

3) 분임토의 평가

- 상호존중, 발언기회의 공정성, 진행자의 중립성, 생각 정리 도움은 모두 95% 안팎으로 매우 높아 숙의 절차의 공정성과 토론문화는 성공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토론내용을 충분히 다뤘다는 평가는 87%, 토론시간이 충분했다는 평가는 69%에 그쳐, 절차의 질에 대한 만족과 별개로 숙의의 양과 시간은 부족했다고 평가함
- 특히, 34세 이하에서 시간 충분성이 62%로 낮아 향후 청년 참여자의 발언·상호작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배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6-5] 분임토의 평가 (그렇다)

(단위 : %)

구분	T2
참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	97
34세 이하	96
35세 이상	97
모든 참여자에게 발언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	96
34세 이하	93
35세 이상	97
진행자가 중립적으로 진행	96
34세 이하	90
35세 이상	98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	95
34세 이하	92
35세 이상	96
토론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룸	87
34세 이하	80
35세 이상	89
분임토의 시간이 충분	69
34세 이하	62
35세 이상	71

03 | 공론화 참여 효과와 만족도 (문58·59)

1) 공론화 참여 효과

- 기본사회 지식 증가 97%, AI 영향 이해 증가 95%, 타인의 의견 이해 95%, 자신의 의견 정리 93%로, 이번 공론화가 단순한 정보습득뿐 아니라 인지적 학습과 상호이해, 자기 의견의 정교화라는 숙의의 핵심 효과를 전반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34세 이하에서 기본사회 지식 증가 99%, AI 이해 증가 98%로 높게 나타나, 기본사회에 대한 사전인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청년층에서 학습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 ‘정부가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응답도 98%로, 이번 공론화 경험이 해당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숙의적 시민참여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짐

[표 6-6] 공론화 참여 효과 (그렇다)

(단위 : %)

구분	T2	구분	T2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	98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94
34세 이하	93	34세 이하	91
35세 이상	99	35세 이상	95
기본사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97	내 의견과 이유를 이전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다	93
34세 이하	99	34세 이하	92
35세 이상	97	35세 이상	94
AI 전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95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91
34세 이하	98	34세 이하	87
35세 이상	94	35세 이상	92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95		
34세 이하	96		
35세 이상	94		

2) 공론화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아 공론화의 운영과 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긍정적임. 다만, 이 수치를 세부 운영요소가 모두 충분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질의응답 시간, 분임토의 시간, 자료의 균형성 등의 상대적 약점은 개선과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6-7] 공론화 전반적 만족도 (만족)

(단위 : %)

구분	T2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 전반적으로 만족	98
34세 이하	94
35세 이상	99

04 |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 (문60, 주관식 유형화)

- 사후 자유응답을 유형화한 결과,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사회안전망'(21%)으로 가장 높게 이해되었으며, 이어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16%),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14%), '인간다운 삶·존엄·기본권 보장'(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참여자들이 기본사회를 특정 단일 정책보다 생활의 기본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사회구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상위 응답이 기본소득·특정 급여제도와 같은 개별 정책보다 사회안전망, 기회, 행복, 존엄, 기본권과 같은 가치와 상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소득·의료·돌봄·일자리 등 구체적 보장'은 7%에 그쳐, 숙의 이후 기본사회를 개별 정책의 집합이라기보다 삶의 기본과 사회적 기회를 보장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세대별로는 두 집단 모두 '최소한의 생활 보장·사회안전망'을 가장 많이 선택해 기본사회에 최소 핵심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임. 다만 35세 이상은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가 18%로 34세 이하 7%보다 높고, 34세 이하는 '신중한 추진·국민 합의·재정 우려'가 10%로 35세 이상 3%보다 높아, 청년층에서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행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임

[표 6-8]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___이다' 주관식 응답 유형 (사후조사)

(단위 : %)

응답 유형 (T2)	전체	34세 이하	35세 이상
최소한의 생활 보장·사회안전망	21	20	21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	16	7	18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	14	16	13
인간다운 삶·존엄·기본권 보장	9	8	9
소득·의료·돌봄·일자리 등 구체적 보장	7	4	8
사각지대·소외 없이 함께 사는 사회	7	7	7
신중한 추진·국민 합의·재정 우려	5	10	3
투명·신뢰·정직한 운영	5	5	4
더 나은 미래·국가 발전 방향	4	7	3
긍정적 평가·지지	3	1	4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	3	3	3
국민 참여·권리와 책임의 균형	3	4	2
AI·기술 활용	1	5	0
지역 균형·지역 간 격차 해소	1	2	0
기타·무응답·운영 의견	3	0	3

※ 사후조사 223명 전원의 자유응답을 15개 유형으로 분류(응답 1건당 1개 유형, 가중치 적용).

〈참고 1〉 [만장일치 수준으로 입장을 같이한 항목]

항목	T2 결과	해석
AI 전환 대응 시급	98%	AI 대응 필요성은 공통인식
AI 도입 확대 긍정	95%	기술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음
청년 취업기회 감소 우려	95%	AI 고용 위험 중 가장 강한 공통인식
중장년 재취업·직업전환 곤란 우려	91%	전환기 노동 위험에 높은 공감
AI 소득불평등 심화 가능성	86%	AI의 분배적 위험에 공감
AI 이익의 대기업·플랫폼 집중	90%	이익 집중에 대한 우려
새로운 분배방식 모색 필요	82%	노동소득 중심 체계 변화 필요성
기본사회 방향 공감	93%	기본사회에 대한 총론적 수용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	94%	현 사회보장체계 보완 필요
기본사회 실현방향 전망	83%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기본사회 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도움	93%	전환 지원 정책에 높은 기대감
생활 유지에 도움	91%	안전망 기능에 높은 기대감
구직·직업전환 교육 지원	96%	가장 강한 정책 공통분모 중 하나
기업의 재교육·전환 책임	93%	기업 책임에 폭넓은 공감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90%	AI 생산성의 노동시장 환원 공감
의료·교육 기본보장	98%	기본서비스의 핵심
일자리 기본보장	96%	일자리 역시 기본서비스적 성격
돌봄 기본보장	95%	돌봄의 높은 우선성
미래대응기금 조성	95%	미래기금 필요성에 매우 높은 동의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	98%	재원방안의 강한 공통분모
비효율·중복 정비	97%	신규부담 이전 효율화 선호
초과세수·개발이익의 기금 적립	96%	장기 자산화에 높은 동의

기본사회에 대한 합의는 추상적 복지확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 전환기 안전망, 기본서비스, 직업전환, 장기적 재원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원리까지 상당 부분 확장되어 있다.

〈참고 2〉[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항목]

항목	T2 결과	해석
현재 제도가 AI변화에 충분히 대응 가능	51%	평가가 양분
AI로 전체 일자리 감소	56%	전망이 분산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59%	재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기 부담에는 유보
노동시간 단축 시 임금 처리 : 대부분 유지, 일부 조정	58%	구체적 설계는 미합의
기본사회 실현의 가장 중요한 조건 : 재원 마련	48%	조건의 우선순위는 분산
미래대응기금 우선 사용	성장동력 38% 재정안정 36%	기금에는 동의하나 용도에는 미합의
공동자산 운영 최우선 원칙	자산보전 36% 독립·전문성 35% 투명성 24%	운영원칙도 선택 분산
소득보장 대상	보편 60% 선별 39%	경계선 수준(공론화 결과라는 점 감안 필요)

필요성에 대한 합의 ≠ 구체적 설계에 대한 합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 3〉[공론화를 통해 입장 변화가 10%p 이상 컸던 항목]

항목	변화	방향
향후 가장 큰 사회변화 AI 선택	+26%p	AI 현저성 대폭 증가
인구구조를 가장 큰 변화로 선택	-17%p	상대적 중요도 하락
기후·에너지 전환을 가장 큰 변화로 선택	-10%p	상대적 중요도 하락
‘일자리와 소득’이 핵심 영향 이유	+28%p	AI 담론이 고용·분배 중심으로 재구성
기본사회 실현 방향 전망	+18%p	실현 기대 상승
기본생활 유지에 도움	+14%p	기본사회의 안전망 기능 강화
기업·사회가 고용위험 부담	+15%p	개인책임→사회적 위험부담 방향
공공 일자리·적정임금 제공	+13%p	공공 역할 강화
돌봄을 우선 기본서비스로 선택	+15%p	돌봄 우선성 강화
기본사회 실현 핵심 조건 : 지속가능한 자원	+13%p	재정 현실성 인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점차 확대	+13%p	확대 선호 강화
기본서비스 확충을 AI 자원 우선용도로 선택	+21%p	현금보다 서비스 지향 강화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형성	+16%p	미래자산 축적 선호 강화
추가재원을 미래기금·공동자산으로 적립	+15%p	장기적 접근 강화
공동자산 투자수익 재투자	+18%p	현재 배당보다 미래투자
기본서비스·시민배당 환원	-16%p	즉각적 환원 선호 감소

기본사회 실현 전망은 65%에서 83%로 18%p 상승했고, 34세 이하에서는 49%→72%로 23%p 상승했다. 공동자산 투자수익의 경우에는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재투자’가 49%→67%로 18%p 상승하고, 현재 국민에게 기본서비스·시민배당으로 환원하자는 응답은 48%→32%로 16%p 감소했다.

이는 이번 공론화의 중요한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숙의 후 ‘당장 나누기’보다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재투자하기’가 강화된 것이다.

〈참고 4〉[공론화 전후에도 입장 변화가 크지 않은 항목]

항목	변화
기본사회 방향 공감	91%→93%
AI 이익의 세금·사회기여 재원화	81%→83%
AI 대기업 초과이윤 공유	78%→78%
초과세수·개발이익 기금 적립	96%→96%
소득·부담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78%→79%
보편적 소득보장	57%→60%
가족·지역사회 돌봄 기간 소득보장	89%→94%
재교육·훈련 기간 소득보장	87%→92%
구직·직업전환 기간 소득보장	82%→84%
의료 기본보장 필요성	97%→98%
현재 국민생활지원·기본서비스에 추가재원 사용	27%→27%

기본사회 방향 자체는 T0 91%, T1 91%, T2 93%로 거의 변화 없다.

즉 속의를 통해 기본사회에 찬성하게 되었다기보다, 기본사회라는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은 이미 높았고, 속의는 기본사회의 정책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5〉[34세 이하와 35세 이상의 입장 차이가 큰 항목]

항목	34세 이하	35세 이상	차이
기후·에너지 전환의 긍정적 방향	22%	53%	31%p
인구구조 변화의 긍정적 방향	17%	52%	35%p
기본적인 소득이 핵심 기본사회	19%	50%	31%p
기술혁신·새로운 도전이 핵심 기본사회	23%	5%	18%p
기본사회 방향 공감	81%	96%	15%p
현 제도로 AI 변화 대응 가능	38%	56%	18%p
기본사회 실현 전망	72%	87%	15%p
적정수준 소득보장	51%	70%	19%p
AI·첨단기술 사회기여 확대	78%	92%	14%p
소득·부담능력에 따른 조세 확대	68%	83%	15%p
AI R&D·미래산업에 재원 우선 사용	36%	18%	18%p
기본소득 등을 재원 우선 사용	20%	32%	12%p

기본사회의 핵심 내용에 대한 세대 차이가 특히 흥미롭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는 34세 이하 19%, 35세 이상 50%로 31%p 차이인 반면,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는 34세 이하 23%, 35세 이상 5%이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34세 이하가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기회·기술혁신·전환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공론화

부록

설문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이번 조사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 참여하시는 국민속의단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AI 전환, 기본사회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항은 공론화 전후 의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하게 질문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분석되며, 개별 응답자의 답변이 외부에 공개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 기본사회위원회
- 조사수행기관: 한국리서치



기본정보(배경문항)

SQ1. 성별

1. 남자
2. 여자

SQ2. 연령대

1. 만15-18세
2. 19세-24세
3. 25-34세
4. 35-44세
5. 45-54세
6. 55-64세
7. 65세 이상

SQ3. 권역

1. 서울
2. 경기/인천
3. 중부권 (강원, 충청, 대전, 세종)
4. 호남권 (제주, 전라, 광주)
5. 대경권 (대구, 경북)
6.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DQ1.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T1, T2//

1. 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재학 포함)
2.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중퇴 및 재학 중 포함)
3. 고등학교 졸업(대학 중퇴 및 재학 중 포함)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졸업

DQ2. 현재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T0, T1, T2//

1. 농림어업 종사자
2.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3.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4.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5.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6급 이하 공무원 등)
6.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7.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8. 전업주부 (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9. 학생 (일하지 않고 학업 중)
10. 다른 직업
11. 무직, 퇴직, 은퇴 (현재 일하지 않음)



I. 현재 삶과 미래에 대한 인식 //T0, T1//

문1.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T0, T1//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2. 10년 후 자신의 삶은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매우 나빠질 것이다
9. 잘 모르겠다

문3.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나 사회 안전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T0, T1//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4. 10년 후 우리나라는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2. 조금 좋아질 것이다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 조금 나빠질 것이다
5. 매우 나빠질 것이다
9. 잘 모르겠다



II. 우리 사회의 대전환과 사회문제

문5. 우리 사회가 다음 각각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0, T1, T2//

	매우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1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3	전혀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4	잘 모르겠다 9
1. AI(인공지능) 전환					
2.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6. 다음 각각의 변화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T2//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9
1. AI(인공지능) 전환					
2.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7. 위 세 가지 가운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T2//

1. AI(인공지능) 전환
2.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3.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4. 차이 없다
9. 잘 모르겠다

문8. [제사·문기]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
지 선택해 주십시오. //T1, T2//

1.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 복지·돌봄·의료 등 생활보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 소득·자산·기회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 세대·계층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등 지역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8.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 개인의 일상과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99. 잘 모르겠다

문9. 다음 각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2	3	4	9
1. 소득·자산의 양극화					
2. AI 활용 격차					
3. 고용불안과 일자리 격차					
4. 세대 간 격차와 갈등					
5.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6. 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7. 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의 격차					
8. 기후·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격차					

문10. 앞으로 10년 동안 위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크게 개선될 것이다
2. 대체로 개선될 것이다
3.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4. 대체로 악화될 것이다
5. 크게 악화될 것이다
9. 잘 모르겠다



Ⅲ. AI 전환에 대한 인식

문11. 현재 AI(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0, T1, T2//

1. 매우 긍정적이다
2. 대체로 긍정적이다
3. 대체로 부정적이다
4. 매우 부정적이다
9. 잘 모르겠다

문12. AI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T2//

1.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9. 잘 모르겠다

문13. 현재 본인께서 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T2//

1. 매우 높다
2. 대체로 높다
3. 대체로 낮다
4. 매우 낮다
9. 잘 모르겠다

문14. AI 기술의 확산이 전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0, T1, T2//

1.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2. 감소하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비슷할 것이다
3.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9. 잘 모르겠다

문15. AI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각이 얼마나 염려되십니까? //T1, T2//

	매우 염려된다	대체로 염려된다	별로 염려되지 않는다	전혀 염려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2	3	4	9
1. 단순·반복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는 것					
2. 전문직·고숙련 일자리가 AI로 대체되는 것					
3.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하는 것					
4. 중장년층의 재취업·직업전환이 어려워지는 것					
5.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					
6. 비정규직·플랫폼노동(배달기사 등) 등 불안정한 고용이 확대되는 것					

문16. AI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각이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T1, T2//

	매우 기대된다	대체로 기대된다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2	3	4	9
1. AI 관련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생겨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2. AI 관련 새로운 직무가 늘어나 청년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는 것					
3. AI 활용과 재교육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직업전환 기회가 확대되는 것					
4. 인력이 부족한 산업·직종에서 AI를 활용하여 필요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5. AI를 활용하여 창업을 쉽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문17. 'AI 도입이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0, T1, T2//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18. 다음 두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T0, T1, T2//

- 1. AI가 확대되면 노동소득만으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득·자산·서비스 분배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 2. AI가 확대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9. 잘 모르겠다

문19. '현재의 복지·사회보장제도가 AI 확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20. 'AI 기술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21. 'AI 도입으로 고용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노동자 재교육과 직업·고용전환 지원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9. 잘 모르겠다

문22. 'AI 기술로 인해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세금이나 사회 기여 방식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고용·소득·직업전환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문23. AI 관련 과세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새로운 재원이 마련된다면, 어느 분야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T1, T2//

1. 직업 재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
2. 기본소득 등 소득보장
3.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
4. 지역균형발전 투자
5. AI 격차 해소
6.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 투자
7.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 확충
8.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형성
9. 잘 모르겠다 [중복선택불가]



IV. 기본사회에 대한 인식

문24.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기 전에 '기본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T0//

1.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2.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몰랐다
3. 들어본 적이 없다

문25. 아래와 같은 기본사회의 방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T0, T1, T2//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기회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 구상입니다.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문26. 'AI·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 등 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보완·발전시킨 기본 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문27.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1, T2//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기회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 구상입니다.

1.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2. 그렇지 않은 것이다
9. 잘 모르겠다

문28. 기본사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내용을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T1, T2//

1.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2. 의료·주거·교육·돌봄·교통·문화 등 기본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
3.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업전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4. 시민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회
5.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
6. 사회가 함께 만든 자산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사회
7.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
8.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
9. AI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문29.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
2. AI 등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3. 공정한 기회 보장
4. 국민적 합의와 시민참여 확대
5.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 운영

문30. 기본사회 정책을 확대할 경우 기대사항과 관련한 진술입니다. 다음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2	3	4	9
1. 일자리가 흔들리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복지 사각지대와 소득·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5. 돌봄·환경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던 일이 제대로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31. 반대로 기본사회 정책을 확대할 경우 우려사항과 관련한 진술입니다. 다음 사항이 얼마나 염려되십니까? //T1, T2//

	매우 염려된다	대체로 염려된다	별로 염려되지 않는다	전혀 염려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2	3	4	9
1. 국민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2. 지원 확대가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다					
3. 지원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4. 현재 세대의 혜택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5. 공동자산이나 공공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V. 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T1, T2//

문32. 소득보장 대상을 정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T1, T2//

1.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큰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2.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본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9. 잘 모르겠다

문33. 소득보장의 수준은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최소한 생존이 가능한 수준까지 보장하면 된다
2.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
9. 잘 모르겠다

문34. 아래 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1	2	3	4	9
1. 새로운 직업을 위한 재교육·훈련					
2. 구직·직업전환					
3.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돌봄					
4. 환경·생태보전 활동					
5. 공익적 지역사회 활동					

문35.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점차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다
2. 현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좋다
9. 잘 모르겠다

문36.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득보장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T1, T2//

1.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한 집중지원
2. 기존 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험 강화
3. 재교육·구직·직업전환 기간의 전환기 소득지원
4. 햇빛·바람·토지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는 소득지원
5.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6. 청년·예술인·농어민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7. 돌봄·환경·지역활동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지급하는 참여소득
8. 기술발전의 성과를 나누는 사회배당



VI. 기본서비스에 대한 인식 //T1, T2//

문37. 모든 국민이 다음 서비스를 기본적인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는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매우 필요하다 1	대체로 필요하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9
1. 의료					
2. 돌봄					
3. 주거					
4. 교육					
5. 교통					
6. 에너지					
7. 통신					
8. 문화					
9. 일자리					

문38.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T1, T2//

1. 의료
2. 돌봄
3. 주거
4. 교육
5. 교통
6. 에너지
7. 통신
8. 문화
9. 일자리

문39. 기본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출에 대한 입장은 다음 중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T1, T2//

1. 기본서비스 확대는 주로 정부의 복지비용을 늘리는 지출이다
2. 기본서비스 확대는 복지인 동시에 건강·고용·교육·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투자이다
9. 잘 모르겠다



Ⅶ. 일자리와 직업전환 //T1, T2//

문40. AI 등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험에 대한 대처와 관련한 방안입니다. 다음 중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깝습니까? //T1, T2//

1.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높여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2. 개인이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이므로 기업과 사회가 위험을 나누어야 한다
9. 잘 모르겠다

문41. 민간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나 공공·사회적 기관이 필요한 일을 제공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문42. AI 도입으로 같은 일을 과거보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문43.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임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기존 임금을 가급적 그대로 유지한다
2.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여 임금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조정한다
3. 줄어든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도 줄인다
4. 기업 규모·업종·생산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9. 잘 모르겠다

문44. AI 도입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 구직 및 직업 전환과 관련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T1, T2//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잘 모르겠다



VIII.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자원 마련과 공동자산 //T1, T2//

문45.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방안을 각각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1	2	3	4	9
1. 비과세·세액감면을 정비하고 복지·재정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인다					
2. 소득과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확대한다					
3. 탄소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부담을 확대한다					
4. AI·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한다					
5.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다					
6.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이나 개발이익 등의 일부를 미래기금·공동자산으로 적립한다					

문46.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등 사회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보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T1, T2//

1. 부담할 의향이 있다
2. 부담할 의향이 없다
9. 모르겠다

문47. 정부에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이나 대규모 개발이익 등 일시적인 추가재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나라의 부채를 갚는 데 더 많이 사용한다
2. 현재 국민의 생활지원과 기본서비스에 더 많이 사용한다
3.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투자를 위해 기금·공동자산으로 더 많이 남긴다
9. 잘 모르겠다

문48. 국민이 함께 형성한 공동자산에서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현재 국민에게 기본서비스나 시민배당 형태로 더 많이 돌려준다
2.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공동자산에 더 많이 재투자한다
9. 잘 모르겠다

문49. 국부펀드나 국민 공동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한 미래세대 자산 보전
2.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산 운영
3. 투자 내용과 성과의 투명성
4. 국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성과 공유
9. 잘 모르겠다

문50.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해의 추가 세수나 잉여금 등의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경기가 나빠져 세입이 줄어들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1, T2//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잘 모르겠다

문51.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면, 다음 중 어떤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T1, T2//

1. 경기 악화에 대비한 재정 안정
2. AI·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3. 지역의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4. 청년의 미래 기회 확대
5. 교육·인재 양성 투자
9. 잘 모르겠다

문52. AI 분야 대기업이 평소보다 많이 얻은 이윤을 협력 회사나 그 회사의 종업원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1, T2//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잘 모르겠다



IX. 공론화 과정 평가//T2//

문53. 이번 공론화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다음 각각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모르겠다 9
1. 자료집					
2. 이러닝·동영상 자료					
3. 홈페이지·Q&A·자료실					
4. 전문가 발표					
5. 전문가 질의응답					
6. 분임토의					
7. 다른 참여자들과의 의견교환					
8. 전체 공론화 과정					

문54. 이번 공론화 자료를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모두 보았다	3/4 정도	절반 정도	1/4 정도	전혀 보지 않았다
	1	2	3	4	5
1. 자료집					
2. 이러닝·동영상 자료					

문55. 이번 공론화 자료집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	2	3	4	9
1.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2.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가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3. 이해하기 쉬운 말과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4.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56.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	2	3	4	9
1. 전문가 발표는 토론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2. 전문가 발표는 이해하기 쉬웠다					
3.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적절했다					
4.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했다					
5.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57. 분임토의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	2	3	4	9
1. 토론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었다					
2. 모든 참여자에게 발언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었다					
3.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였다					
4. 진행자는 중립적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5. 분임토의 시간은 충분하였다					
6. 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문58. 다음 각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1	2	3	4	9
1.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본사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					
2. 나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AI 전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3. 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 의견과 그 이유를 이전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4. 나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그 이유를 이전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5. 나는 정치·사회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6. 정부는 앞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					
7. 다음에 국민숙의단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문59. 이번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
2. 대체로 만족한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60. 마지막 문항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OO이다.'라고 할 때, OO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X.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T2//

DQ3. 현재 일하고 있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임금근로자
2. 비정규직·기간제 임금근로자
3. 자영업자
4. 특수고용·플랫폼노동
5. 프리랜서
6. 기타

DQ4. 귀 닥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00만원 미만
2. 200~400만원 미만
3. 400~600만원 미만
4. 600~800만원 미만
5. 800~1,000만원 미만
6. 1,000~1,200만원 미만
7. 1,200만원 이상

DQ5. 우리 사회의 계층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층
2. 중상층
3. 중층
4. 중하층
5. 하층

DQ6. 평소 업무 이외의 용도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3. 사용해 본 적이 없다

DQ7.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사용해 본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3. 사용해 본 적이 없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